

미래형 예비군 훈련체제 정립에 관한 연구

정 원 영*

목 차

- I. 서 론
- II.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III. 선행연구 분석
- IV. 향후 환경 전망
- V. 예비군 훈련체제 개선 방안
- VI. 예비군 훈련센터 정립
- V. 결 론

I. 서론

1. 연구 배경

예비군 훈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이는 제도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으나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에 그 근본적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비전력은 무장 병력으로서의 예비군뿐만 아니라 민방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위대, 학생조직 나아가서는 여성 및 노령 인구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셈인데, 군사적 훈련을 받는 예비군만을 예비전력으로 간주하여 나와 상관없는 무관심 영역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제1국민역~현역~예비역 등으로 연계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남성들마저 현역에서 전역함과 동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예비역 신분으로 하게 되는 예비군 복무는 본인 희생 하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하였다. 따라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예비군 훈련의 출발점인 국민들 참여의 자발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40여년 동안 운영해 온 예비군 제도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우리 실정에 있어 긴요한 향방작전을 수행한 것은 물론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한 여러 부문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 사회에 팔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다. 무엇보다 예비군의 가장 큰 위상은 군과 사회의 양쪽에 편성된 자원으로서 군과 사회의 교량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며, 또한 '없어도 무방하나 있으면 더욱 좋은' 식의 대접을 받았지만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선 무시할 수 없는 억지 전력으로 작용되어 한반도 평화 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이다.¹⁾

이제 우리나라 국방행정에 큰 획을 이룬 국방개혁 2020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예비군에 대한 개혁을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방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통해 장차 예비군의 잠재적인 전력으로서의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비군 규모가 단계

1) 1968년 향도예비군이 창설될 당시에 예비군 규모는 250만 명이었다. 군사 기술력도 미흡하고 무기체계조차 변변찮던 그 시절에 있어 군사력은 곧 병력 수가 가장 중요한 전투력 지수였으며, 이에 따라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대병주의(大兵主義) 관념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한때 예비군 규모는 450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예비군 훈련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장차 억지전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상비군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즉 장차적 환경에서 유사시 적의 위협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동원태세를 완비하고 향토방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II.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관련 법령 및 규정

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8097호) 제27조는 예비전력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는 ① 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 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 규모와 연동하여 개편·조정하여야 한다 ③ 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61호) 제16조에서는 ① 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보다 구체화 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 훈련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예비군 임무는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 8422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 수요를 위한 동원에의 대비를 해야 하고,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자(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공비를 소멸할 임무가 있다. 또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등의 경비 임무가 있으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임무도 있다.

동법 제6조에 의해 국방부장관은 년 20일의 한도 내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으며²⁾, 예비군대원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 포함)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3) 병역법

병역법(법률 제 8549호) 제49조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것인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또는 점검을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연간 30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에 관한 계획 등은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0286호) 제 100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4)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서

국방기본정책서 부록으로 되어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예비군 훈련에 관한 추진 중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보다 훈련을 보다 단순화하는 것, 전시 임무수행능력 향상 및 예비군의 편의를 고려한 예비군훈련 시간 조정, 성과위주 훈련방법 발전 등을 제시하면서, 통합예비군훈련장(훈련센터) 운용 개념을 도입하는 것도 제시하고 있다.

2. 예비군 훈련체계

1) 훈련유형별 목표

현재 목표관리상 예비군 훈련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 동원예비군훈련, 향방예비군훈련, 간부교육 등이 그것인데, 동원예비군 훈련의 경우는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향방예비군 훈련은 개인전기 유지 및 동원태세 확립과 통합방위능력 향상 등을 위한 것이며, 간부 교육은 향토방위작전 지휘능력과 교육훈련 지도능력, 그리고 직책에 따른 임무수행능력

배양 등이 목표이다.

2) 훈련의 종류 및 운영

이같은 예비군 훈련을 신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원예비군은 동원지정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참가여부, 복무년차(대개 1~4년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동원훈련,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 소집점검 훈련 등 3유형의 훈련이 있다.

동원훈련은 긴급단계 및 정상 4단계의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중 1~4년차 병, 1~6년차 간부를 대상으로 2박3일간(28시간) 병무관서장 및 소집부대장 책임하에 실시한다. 동원훈련 미참가자 훈련은 1~6년차 간부, 1~4년차 병 중 동원미지정자와 동원지정자로서 동원훈련에 소집되지 않았거나 불참 또는 연기, 응소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귀향조치 및 퇴소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집점검훈련은 유사시 예비군 동원소집절차 등을 점검하기 위한 훈련으로서 동원지정자중 5~6년차 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향방동원 및 병력동원소집 절차와 임무를 숙지토록 한다. 소집점검 훈련의 소집책임은 자원관리부대장에게 있으며, 훈련실시 책임은 동원지정자의 경우 해당 소집부대장 또는 수임군부대장이 지정한 부대장에게, 동원 미지정자는 자원관리부대장에게 있다.

향방예비군은 동원예비군이 아닌 자로서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 등이 있다. 향방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8시간씩, 향방작전을 위한 개인전투기량 숙달에 중점을 두고 사격, 안보교육 및 향방작전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향방작계훈련: 5~6년차 병, 1~4년차 동원미지정 및 1~6년차 동원미지정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후반기 각 6시간씩 훈련을 실시한다. 작전책임지역 대대장 통제 하에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작전계획에 기초하여 실제 지형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정리하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예비군 훈련의 종류

구분	훈련기간	대상	훈련내용
동원훈련	2박3일(28H)	1~4년차	직책수행/작계시행훈련
동원미참훈련	3일(24H)		주특기/전술과제훈련
향방기본훈련	1일(8H)	5~6년차	향방과제훈련
향방작계훈련	2회(12H)	1~4년차(미지정), 5~6년차	임무수행절차훈련
소집점검훈련	1회(4H)	5~6년차(지정자) *향방작계훈련 1회 감면	전시편성/임무확인

<표 2> 예비군 운영의 실제

구분	1-4년차	5-8년차
전시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창설 자원, 손보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방자원, (증창설 자원)
훈련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원훈련 : 소집부대 입영훈련 동원미참훈련 : 자원관리부대 출퇴근 훈련 소집점검훈련 * 동원지정자 : 동원훈련 * 동원미지정자 : 미참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방기본훈련 : 자원관리부대 출퇴근훈련 향방작계훈련 : 예비군부대훈련 * 지정자 : 소집점검, 향방훈련 * 미지정자 : 향방훈련
훈련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집부대 자원관리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관리부대

<표 1>을 보면, 현재의 예비군훈련은 전시 운용 개념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비군 1~4년차는 주로 전시에 증·창설이나 손실보충 자원으로 활용되며, 5~8년차는 향방작전을 위해 투입되는 자원(일부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증·창설 자원으로 도 편성되기도 함)인데, 전시 운영이 증·창설 및 손·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소집점검 훈련이나 동원미참 훈련만 실시하고 있어, 전시 운용과 평시 훈련 연계가 미흡한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훈

련의 형식화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원래 예비군은 8년 복무 동안 단일 신분이기는 하나 임의적 구분에 의해 <표 2>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훈련 시간

예비군의 교육훈련은 병역법과 향도예비군설치법에 의거, 각각 연간 30일과 20일 한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의 필수훈련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예비군 훈련 시간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설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는데, 선거때마다 훈련시간 단축이 호혜적 이슈로 다루어져 왔던 바, 군 훈련 담당자들이 현재의 교육시간으로는 예비군을 훈련 상 제반 교육과목을 충분히 숙지토록 할 수 없다는 걱정을 할 정도가 되었다.

<표 3> 훈련 시간의 변화

구분	주요 내용	동원훈련	동원미지정자
1983	연령별 차등제 훈련	5박6일	60H
1987	예비군 명칭 변경	4박5일	52H
1994	복무연령제(33세) →복무연한제(8년)	3박4일→2박3일	32H
2004	7,8년차 훈련면제 확대	2박3일→1박2일→2박3일	24H

따라서 개혁적 측면에서 예비군 교육 훈련 정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2003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 에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와 비교시 북한의

예비군 훈련 정도를 물어 본 바에 의하면 <표 4>와 같이 대답하고 있는데, 예비군 대원 스스로도 우리의 예비군 훈련수준이 상당히 낮음을 인지하고 있다 하겠다.

<표 4> 남한 대비 북한 예비군훈련의 추정

구분	사례수 (명)	10배 정도 (%)	5배 정도 (%)	2배 정도 (%)	비슷함 (%)	더 적을 것 (%)	계 (%)
2003년	2,087	37.57	33.92	17.59	6.37	4.55	100.0
2007년	1,046	34.50	25.53	18.63	10.81	8.96	98.44

* 2007년 경우 무응답 1.56% 있음.

4) 훈련장

예비군훈련장은 동원훈련장과 종합훈련장으로 구분하여 운용되는데, 동원훈련장은 향토사단 및 동원사단, 전방군단별로 1~3개씩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훈련장은 예비군관리대대별로 1~2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관리 인원의 제약으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표준화가 되어 있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다.

자원관리대대(행정구역단위)별로 훈련장이 분산 운용되는 까닭에 운영유지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훈련전담 여건(전·평시 고유임무 수행, 부대운용 등)이 미흡하며, 훈련장에 대한 집중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농어촌지역 훈련장은 자원감소로 소수인원만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 훈련장은 소음, 환경 문제 등으로 민원 및 이전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표 5> 예비군 훈련 관련 사항

구분	사제수 (명)	입퇴소	인원 과다	교육 시설	편의 시설	교보재	교관	식사	훈련장	교육 내용	계
2003년	2,068	29.69	11.12	1.11	24.52	4.21	0.92	17.70	7.64	3.09	100.0

구분	사제수 (명)	용소 여건 (교통, 시각)	훈련 시설	교보재	교육 내용	교관 운용	훈련 보상비	편의 시설	식사 여건	예비군들의 의식 및 태도	계
2007년	1,046	19.67	12.52	2.97	5.17	2.40	19.92	19.77	11.24	6.35	100.0

* 숫자는 해당 영역 %임

<표 5>는 2003년과 2007년 두 번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2003년 경우는 훈련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을 예비군들이 지적한 것이며, 2007년 경우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내용을 물은 것으로서 사실상 맥락이 같다. 이를 보면 훈련 시설을 중심으로 한 훈련장 여건에 불만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예산을 중심으로 한 제반 개선 여건이 여의치 않음에 따라 획기적인 체제 개선 외에는 대안이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5) 기타 훈련 여건

현재 법규 및 방침 보류자 지정으로 80여개 직종에 대해 예비군훈련 보류대상자가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훈련의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비군 교육훈련 방식의 낙후성도 말할 수 있는데, 마일즈 장비 운영, CBT 교육훈련 방식 도입 등 첨단화된 환경에 걸맞는 교육훈련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상비군과 수준 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평면적인 교보재를 중심으로 한 훈련은 교육성과에

있어서 짚어보아야 할 때라고 본다.

예비군 훈련 시 지급되는 보상비는 일반훈련 시 중식비로 지급되는 금액과 동원훈련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여비 및 보상비로 구분되는데 동원훈련의 경우 귀향여비 83원/km, 훈련보상비 2,000원이 지급되며, 동미참/향방기본훈련은 보상비 3,500원+여비 1,800원으로 구성된다.

Ⅲ. 선행연구 분석

예비군 훈련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연구 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등에 있어서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1. 중·장기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연구

중·장기적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해 처음으로 시도된 연구로서(한국 국방연구원, 1994.6) 먼저 <표 6>, <표 7>과 같이 먼저 예비군 신분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각 훈련을 설정하고 있다. 예비군 구성에 있어 당시 현안이었다 보충역 출신자 문제를 별도로 구분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아울러 개인훈련/부대훈련의 유형화도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훈련의 경우 개인별 임무·자격·기준을 지정하여 자격제를 실시할 것과, 개인 훈련 공인센터를 운영하여 훈련시간의 개인 선택제를 확대할 것, 합격제를 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부대훈련은 직책수행훈련·전술작계 훈련 위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며, 동원훈련 미실시 연도에는 동원지휘 조 훈련을 실시할 것과 창설부대는 매 2년 단위로 동원지휘조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6> 중기적 예비군 훈련 실시(안)

구분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준비예비군	보충예비군
예비역 출신	연차	전역당해년차	1~2년차	3~5년차	6~8년차
	교육훈련	소집점검(4H)	동원훈련(32H) 소집점검(4H)	동원훈련(16H) 향방훈련(8H)	6년차에 한해 향방훈련(8H)
보충역 출신	연차	-	-	1~3년차	4~8년차
	교육훈련	-	-	동원훈련(32H) 향방훈련(16H)	6년차에 한해 향방훈련(8H)

* 시간은 년단위

<표 7> 장기적 예비군 훈련 실시(안)

구분		긴급예비군	대기예비군	준비예비군
예비역 출신	연차	1~2년차	3~4년차	5~8년차
	교육훈련	소집점검(4H)	동원훈련(44H) 소집점검(4H)	5년차에 한해 향방훈련(4H)
보충역 출신	병역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봉사역 자원으로 활용			

* 시간은 년 단위

교육훈련의 과학화 측면에서 상비군부대 훈련과 호환성을 가질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CBT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훈련체계를 개인훈련-팀훈련-지휘참모훈련-부대훈련(SIMNET)-종합전술훈련(MILES)-표준 전투훈련장 식으로 단계화 할 것과, 훈련장의 통합화 및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육군 예비전력 발전 연구

범위가 육군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발전적인 예비전력 육성 및 관리 방안”(KRIS, 2005.12)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예비군 교육훈련 체계와 예비군 훈련센터 운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복무 형평성에 중점을 둔 연차별 차등제 훈련에서 전시 신분별 임무에 부합되는 신분별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전환할 것과 경제적 보상체계를 강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분별 교육훈련 방안으로 동원군/향방군 신분 설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동원군의 경우 소집부대가 책임 관리하고, 개인훈련은 소집부대가 아닌 해당지역의 훈련센터에서, 부대훈련은 소집부대에서 동원훈련 및 동원소집점검훈련만을 실시토록 재설계하고 있다. 향방군은 자원관리부대에서 관리하며, 개인훈련 및 부대훈련을 훈련센터에서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앞의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같이 개인훈련 및 부대훈련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개인훈련은 상비군에서 활용하게 될 디지털화된 원격교육체계 및 과학화 훈련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부대훈련의 경우는 동원군의 경우 지휘통제 및 전술기동 훈련까지도 과학화 훈련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훈련을 실시하며, 향방군의 경우 지역방위훈련 등에도 과학화 훈련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지역방위 훈련을 위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센터 운영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센터에서 동원군의 개인훈련 및 향방군의 훈련을 실시하고, 선택적 자율 입소제도 실시, 지역주민의 훈련 참관 등을 제안하고 있다. 훈련장비의 현대화 방안으로 현역 무기/장비의 전력화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 계획을 세우고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는 현역무기와 동일세대 수준으로 교체, 통신 장비는 현역 작전통제부대와 동일한 장비로 교체할 것

을 제안하고 있다. 부대 임무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기편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도 언급되었다.

3. 학술논문 관점에서의 연구

정책연구 차원이 아닌 학술논문 입장에서 다룬 연구도 있다. “예비군의 지역사회 관심도에 따른 예비군 훈련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조효건, 2000)에서는 예비군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교육환경과 예비군들의 질서의식 지적이다. 예비군 교육훈련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예비군들의 질서의식 교육이 중요함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둘째로 예비군 교과편성의 적절성을 언급하였다. 정신교육 및 안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회변화 적응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절한 통제요령과 평가방안도 지적되었다.

또 하나의 이슈가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훈련의 방향 정립이다. 교육 과목 개선을 통해 자발적·능동적인 참여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발전에 관련된 정보교육을 포함하여 주민의 의식구조 개선 차원의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향으로 외적 환경에서는 과감한 예산투자로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내적 환경으로는 교관 및 조교의 모범적인 준법행동을 제시한다. 교육훈련 통제 및 평가에 있어서는 상·벌점 제도를 법규의 한도 내에서 제도화 하여 민주적 통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각종 병무 부조리의 요인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 실질적인 평가 실시 및 측정식 합격제 훈련을 실시하는데, 예비군 훈련군기 평가기준 설정 및 시행을 제시한 점이 특이하다. 결론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데, 예비군의 위상 및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예비군 훈련시 군의

특성 있는 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매체의 개발과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학위논문인 한국 예비군 교육훈련 체제의 개선방향(신진선, 2003)을 보면, 보다 근원적 차원에서 동원제도/병역제도 정비부터 언급하고 있다. 즉 국민의 동원의식 함양과 병역의무 연장선상으로 예비군 복무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교육훈련환경 개선방안으로 기존 훈련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법의 재모색, 병 공통과제 훈련장과 전술과제 훈련장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훈련 실습인원 분산하는 것, 예산확보를 통한 훈련대상자들의 의·식·주에 관련된 사항 개선 등을 언급하였다. 훈련여건 개선으로 연중 예비군 훈련장을 개방하는 것과 함께 지방자치 단체와 군부대간 협조제도를 마련하여 예비군 훈련장을 공원화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교육훈련방법 개발방안으로는 국가안보와 통일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정신교육체계를 정립하고,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군 평생교육 발전 여건 조성, 사회교육과 군 평생교육의 연계, 병역자원의 산업인력화 협력체계 구축 등을 꾀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시간의 적정화 문제도 언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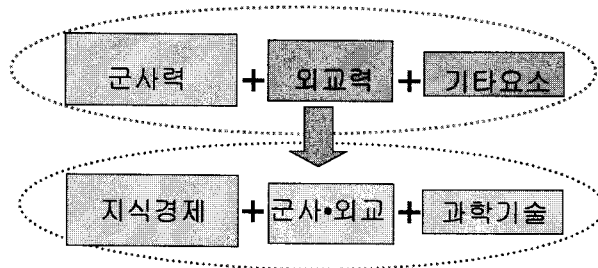
IV. 향후 환경 전망

1. 복합적 안보 개념의 등장

지금까지 안보 개념의 핵심을 이루었던 전통적 안보 개념에 상응하는 재난 및 테러 등의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사례 증가는 이를 위한 대비책의 필요성을 한층 강조하게 되리라 본다. 사실 다양한 복합재난 및 예측곤란 자연재해는 전쟁 못지않게 피해를 낳고 있으며, 피해의 심리

적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수조원 수준의 국력 손실이 우려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안보 개념 차원의 정부책임성 증대와 이에 대처하는 국가 자원의 다양한 활용책 마련이 필요하게 된다. <그림 1>은 안보 요소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국방 분야에 대한 자원의 우선도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등 국가위기관리 영역이 재편될 것이다.



<그림 1> 국가안보 요소비중의 변화

따라서 전·평시, 분야별 분산형태로는 확대되는 위기관리에 대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만큼 전·평시 위기관리 기능의 연계성 강화(기능 및 자원)가 필요하고, 전쟁과 테러의 패러다임 변화(주체, 수단)에 대한 대응책 마련 또한 요구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 개념이 강조되는 이면에 전쟁 양상 또한 보다 발전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 간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그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이다.

향후 전쟁은 지식·정보의 상대적 우월성이 승패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본다. 전장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지식·정보체계(C4ISR)와 원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파괴할 수 있는 장사정 정밀 유도무기(PGM)의 상호 결합이 대표적 예이다.

공중·우주와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가 매우 중요시되며, 군대조직은

고도로 네트워크화 되고, 전사(戰士)들은 고지식·고기능·고기술의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미래 전쟁은 <표 8>과 같은 작전 개념 하에 이루어질 것이며, 신속결정작전(RDO)/효과중심작전(EBO)의 개념 하 주변국이 군사강대국임을 고려하여 상대국과 비대칭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 정·기배합의 방책을 최대한 모색하게 될 것이다.

<표 8> 미래 전쟁 작전개념

다점·다정면 동시공세적 기동전			
① 인간중심의 전투	② 전공간·다차원 동시통합전투	③ 전략적·작전적 중심집중타격전	④ 정·기배합의 기동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요원 공격/방호 • 비살상전 • 심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투공간의 확대 • 사이버공간의 활용 • 정보우위확보 • 동시통합작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 중심 집중타격 • 우군 중심 방호 • 효과 중시 작전 • 비대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고속 기동전 • 비선형전 • 분권화 대응

이와 같이 포괄 안보 개념과 전통적 안보 개념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끝과 시작이라는 선을 분명하게 그을 수 없는 성격이어서 항상 같은 맥락에서 고려해야 하는데 장래에는 이같은 성격이 보다 강조될 것으로 생각한다.

2. 한반도 정세

1) 남·북 문제

남·북 문제에서는 이미 체제경쟁에서 한국의 절대적 우월성이 확실하게 노정되었는데 국력의 격차는 더욱 크게 확대될 것이다. 2010년 경

에는 그 격차가 약 35-40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며, 2020년에는 100배 정도로 예상되는 바, 국방비 측면에서만 볼 때 대북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경제력)의 우월성, 북한군 전투준비태세 구축의 한계성(기근, 사기저하, 훈련부족, 장비의 노후화 등), 전쟁지속능력의 제한성(특히 에너지난), 신규투자 여력의 제한성, 한국의 첨단 전력 증강추세, 한미동맹의 강화 및 연합방위 능력의 탁월성 등이 효과적으로 복합되어서이다.

하지만 북한 위협의 소멸을 상당기간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 화포의 위협, 특수전 능력, 그리고 돌발적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비책을 필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07년 6월 현재 나타난 북한의 대남 견제 상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예이다. KN-O2 단거리지대지 탄도미사일의 운용을 보면 2006년 5월 1일, 2007년 5월 25일과 6월 7일, 6월 27일 등 네차례 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이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습무기로 발사정후 은닉 효과가 매우 크며, 수도권을 겨냥(120KM 이내)하나 요격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커드(300KM, 500KM)는 대구 및 부산을 겨냥하나 역시 요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북한의 핵 보유 관계이다. 북한 핵은 장차 북의 유일한 대처수단으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요소로 보이며, 6자 회담이라든지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이를 기득권으로 인정하려는 정책을 배제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 핵의 전술적 운용이 아닌 주변국 협상카드로만 인식하는 추세인 점(비기위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협상용으로 응답이 70%임에 비해 전쟁도발용은 16%에 불과하다. 2002.11~2003.1)도 지나친 낙관적 견해여서 우려되는 바이다.

2) 주변국 정세

장기적으로 안보위협 구도의 중심축이 북한 위협에서 주변국의 불특정·불확실 위협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한국 단독의 군사력으로도 북한을 대처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에 비해 대주변국의 불특정, 불확실한 위협은 점차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세계 5대 강국(미, 중, 일, 러, EU)중 4강에 의해 둘러싸인 형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4강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교차되어 있고 많은 분쟁요인들이 잠복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경제 및 기술 중심(low politics)의 탈 냉전 지경학적 질서(geo-economic order)가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20-30년에는 정치 및 군사중심(high politics)의 지정학적 질서(geo-politic order)가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중 간의 지구적 차원의 패권 경쟁 가능성, 중·일간의 지역차원의 패권경쟁 가능성, 바다와 섬을 위요한 영유권, 자원 및 에너지와 해상수송로 확보 경쟁 가능성 등이 예상되어 항상 이에 대한 준비책을 어느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나라들에 대해 보다 살펴 보기로 한다.

(1) 일본

일본은 군비증강의 본격적 전개 및 자위대를 합헌화하기 위한 평화헌법 제9조의 개정을 진행 중인데, 타결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김경민, 2007).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일본은 금기시하던 [우주의 평화이용원칙]을 무너뜨렸고, 첩보위성 4기체제의 구축을 완성하였으며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합의하였다.

이지스함 6척 모두 미사일 요격용 스탠다드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것이고, 북한을 평계로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1기당 2천 5백억 원이나 하는 F-22 전투기를 들여와 중국보다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며, 언제든지 필요한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비축하면서 필요한 무기체계의 우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현 중이다.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듯이 첨단 전투기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으면서도 사정에 따라 수입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이미 군사대국의 입지를 분명히 했다.

(2) 중국

중국은 2001~2005년 기간 중 세계 1위의 재래식 무기 수입국으로 등장하였다(김태호, 2007).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신무기체계의 국내 연구 개발과 외국 무기 및 기술 도입 간 상승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미 戰區級(theater-level) 전투수행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주한미군

아마도 8군사령부의 존속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신설되는 미 한국사령부(US KORCOM) 예하 지상군사령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UEx(미래형 운영사단)으로 2005년 개편을 완료한 2사단이 핵심이 될 것이다. 19전구(戰區)지원사령부(대구 소재)가 지원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현 주한미군사령부는 현 행정사령부 성격에서 전구급 전투사령부 성격으로 전환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이양후에도 작전사급 협조기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본다.

3. 행정 및 사회 환경의 변화

1) 행정환경의 변화

국내에서는 놀라운 정도의 시민사회의 성장이 이루어져서(다원화, 집단행동화, 세력화) 이에 따른 영향력 역시 증대될 것이다. 위기의 일상화(북핵문제, 사스, 재해, 재난, 물류대란)로 인해 비상대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지금보다 더 저하될 수도 있고, 사회적 갈등 급증(노사문제 등)으로 극단적 행정소요 창출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행정패러다임으로는 효과적 대응이 더 이상 곤란하게 되어 정부주도하에 국민이 순응하는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통제위주 행정에서 성과관리 위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폐쇄적 행정문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요구가 크게 증가될 것이다.

다양한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거버넌스적 개혁과 함께 각 부처 간 유기적 연계성이 다음과 같이 요구되리라 본다.

- 탄력적 행정시스템 구축(효율적인 행정): 통합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봉사하는 행정): 서비스 공급시스템으로서의 훈련 실시
-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된 정부(투명한 행정): 행정의 개방성 강화
- 국민참여 확대(함께하는 행정): 국정파트너로서의 국민 인식, 전문 옴브즈맨제도 도입
- 국민의 신뢰회복(깨끗한 행정): 권위주의 행정 탈피

2) 사회환경의 변화

그동안 우리나라 비상대비체제를 유지하여 온 근간 정신은 단일민족 의식을 통한 강한 항전·저항의식이었다. 역사적으로 970여에 이르는

의침을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통해 극복해 왔던 것이다³⁾. 이러한 국민 정서는 국난 시 위기를 극복하고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정체성을 면면히 이어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는 농경사회의 연고주의 의식이 매우 컸다. 혈연성, 지역성과 같은 제1차적인 인간 유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군도 이러한 요소를 또한 활용하여 군 조직 관리를 보다 효율화하고, 동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통적인 권위주의와 위계 및 서열중시의 의식도 순기능을 발휘하게 하였는데, 능력 및 업적에서 연유된 합리적 권위가 대부분이어서 국민의 자발적 응소를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사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가 고도로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가 촉진됨에 따라 혈연성 및 지연성의 동질성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이해관계의 다원화로 얽힌 이익집단간의 갈등이 증가되고 있다.

고도의 정보화 및 지식화 사회로의 진입 역시 큰 변화이다. 시민의 생산 활동, 일상생활, 문화 공간, 가치 및 인식 등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지식, 네트워크, 속도, 효율성, 창의력, 개성화, 맞춤형 등이 중시되었는 바, 비상대비 측면에서도 정보화, 지식화, 네트워크화, 탈 대량화, 기동화, 기계화가 요구된다 하겠다.

사회의 노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도 주지할 일이다. 총인구 대비 청장년 인구가 2000년 34.4%에서 2020년 25.3%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병역자원 연령층인 15-24세 인구는 2000년 16.2% (7,662/47,275)에서 2020년 13% (6,796/52,358)로 감소될 것으로 추산된다. 노령화 지수 $\{(65\text{세 인구}/0\text{-14세 인구})\times 100\}$ 는 2000년 30 수준(평균 수명 74.9)에서 2020년 76 수준(평균수명 78.1)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예상외로 조기에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노령화 현상은 사회의 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3) 최근 1998년 IMF사태 시 금 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 응원에서 국민적 단합의 위력을 전세계에 과시한 것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라, 가용한 비상대비 자원의 감소로 비상대비 제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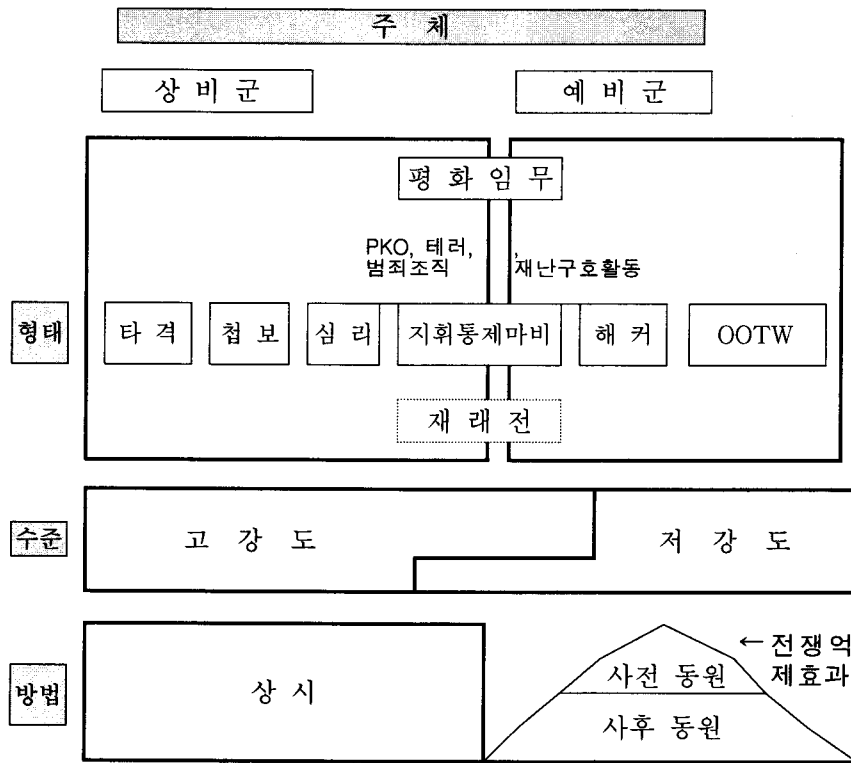
도시화 현상의 가속화를 들 수 있는데, 도시화는 방자에게는 유리하고 공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인구와 도시구조물은 공자의 기동에 장애가 되고, 관측 및 사격을 제한하며, 통신 장애가 유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비군사적 인원 및 시설의 동반 손실 및 파괴를 가져 올 수 있으나, 동원의 대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따라서 교통 및 통신 네트워크가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신속 동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V.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방안

1. 예비군 임무 재설정

앞으로의 군사임무는 지금과는 다르게 주어질 것이다. 북한 중심의 위협에서 다자적 위협으로의 변화, 군사기술 및 혁신변화에 대한 대처, 국방비 문제를 관련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국내현실의 변화 등의 근인적(近因的) 요소에 무기의 첨단성, 다양화된 위협양상(전쟁/비전쟁 요소), 과학기술의 혁신 등의 원인적(遠因的) 요소가 혼합되어 기존의 군사제도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역할을 힘으로 지탱하기 위한 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태·수준·방법 별로 주체(상비군·예비군) 임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는 즉 이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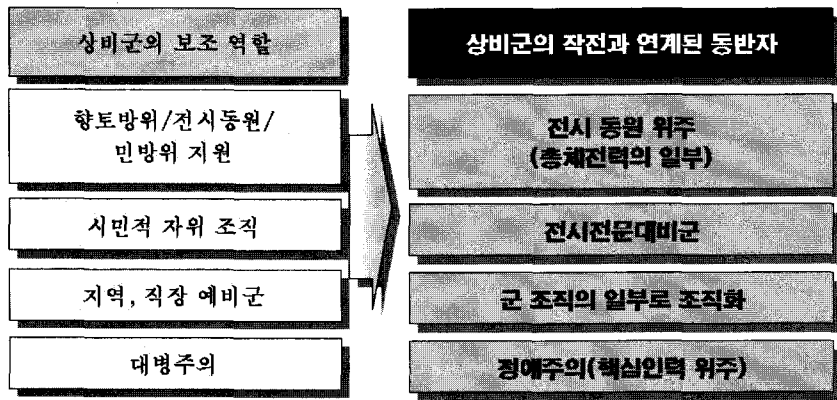


<그림 2> 군사임무 재조정에 따른 상비·예비 인력배합(안)

<그림 2>의 형태별 측면에서 상비군과 예비군 영역을 설정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군의 임무를 가정하여, 군에서 상시적으로 담당해야 할 영역을 상비군의 것으로 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나 민간영역에서도 어느 때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예비군의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두 영역 간에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 아니고 융통성이 있음이 물론이며, 또한 여기에서의 예비군은 지금의 예비군과는 수행임무 측면에서의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제도일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수준별 측면에서 양 영역의 구분 또한 형태별 측면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는데, 양 영역간에는 물론 고강도와 저강도의 주류는 있으나 상호 교차되는 영역 또한 있음이 물론이다. 운용 방법 측면에 있어서는 위의 양 측면보다는 어느 정도 구분이 분명하다 하겠는데, 예비군은 동원이라는 기능 하에 운용되는 까닭이다. 이상의 형태·수준·방법의 세 측면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기 보다는 상호 보완 관점에서 같이 운용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비군의 역할을 재설정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예비군의 역할 재설정(안)

앞으로는 현재와 같은 재래전 개념의 예비군의 역할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양적 우선의 예비군보다는 첨단전쟁에서 필요한 질적 위주의 예비군이 더욱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예비군의 운용방향으로 예비군은 상비군의 보조 개념이 아닌 국가방위의 주력군으로 활용하고, 그 편성도 정예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지역예비군 개념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민병대 성격으로 전환시키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병무청 관리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신 예비군 신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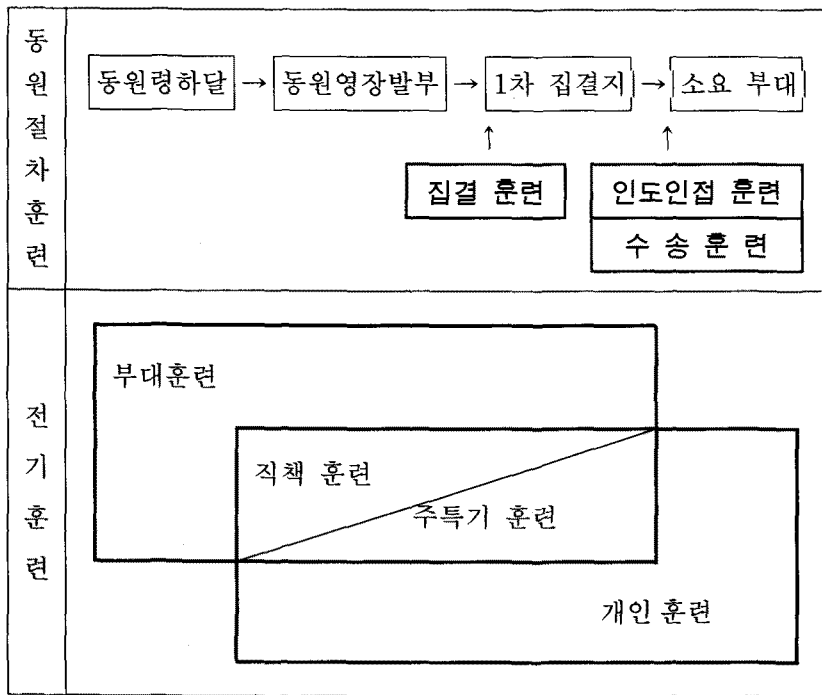
예비군 편성체계는 동원군(부대확장 및 손실보충), 향토군(향토방위 및 전쟁지속 동원자원), 퇴역군(추가동원 대상자로 행정편성)으로 설정하여 동원군 중심의 초기동원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신분 개념과 운용 방향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신예비군 설정

구 분	신분 개념	운용 방향
상비군	· 국가위기관리, 고강도 수준 즉응대처, 즉응사용 가능 편조부대	· 정예기동 상비군화
동원 전력	동원군	· 국가방위의 핵심전력, Cadre로 평시 운영, 전시 동원으로 완편 (현 동원사단 Cadre 요원)
	향토군	· 주전투군 작전지원, 책임지역내 적 격멸 (현 향토사단 소요 자원) · 장차 지방자치단체 이관
	퇴역군	· 추가동원 대상
	(단순 노무인력)	· 현 전시근무소집 인력 · 행자부 인력동원으로 전환

3. 예비군 훈련체계

예비군 자원의 교육훈련 방향은 상비군과 동등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 전력화를 위한 교육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동원절차 훈련 및 전기(戰機)훈련을 중심으로 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4>와 같은데, 동원절차훈련의 경우 응소율 점검 및 동원행정체계 점검에 주안점을 두고 전기훈련의 경우는 부대훈련의 경우 분배훈련, 전개훈련, 동화훈련, 전술훈련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개인 훈련은 주특기훈련 차별화가 주안점이고 훈련 합격제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라 하겠다.



<그림 4> 예비군 훈련체계 설정(안)

새로이 설정된 예비군 신분 및 복무체계와 연계하여 질적 정예화를 추구하며,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관건으로 한다. 신분과 훈련유형을 확실히 구분하여 해당신분에서 정해진 훈련을 필히 받도록 하고 다른 유형의 훈련으로 대체하는 일은 지양한다. 전기훈련의 경우 동원군과 향토군 모두에게 해당될 것이고 동원절차훈련은 동원군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동원군 훈련의 경우 개인 및 주특기 훈련, 직책수행훈련, 부대종합훈련, 동원소집 점검훈련(전시 동원편성 및 임무확인, 동원소집절차 및 경보전파체계 점검) 등이 주 내용이 된다. 향토군 훈련은 항방기본훈련(개인전기 숙달), 항방작계훈련(목진지단위 지역 및 주요시설 방호능력 배양), 기동 및 타격대 훈련(주특기 및 팀단위 전술훈련 강화, 기동타격 능력 배양), 재해·재난훈련(예비군동원방법 및 복구에 따른 통합훈련)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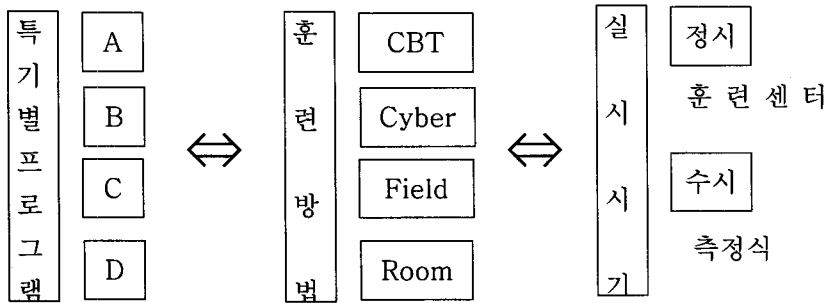
이 같은 바는 동원군이 감편부대 충원을 제1목적으로 하는 까닭에 작계 임무수행(개인전기 숙달, 동화)에 중점을 두게 되고 향토군은 후방지역 작전 수행에 제1목적을 두어 병참선 경비, 핵심기반시설 보호, 전개요충지 경비 등을 담당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선택적 자율 입소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훈련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예비군학교를 설치하여 예비역 간부의 정예화를 기하고, 장차 교육훈련의 핵심기관이 되게 하여 이곳에서 연구발전과 교육시스템 운용 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훈련참가자들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여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경우 법 적용은 강화하는 반면, 처우개선을 법제화하여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예비군 훈련 모델

예비군 훈련은 프로그램과 훈련방법 그리고 실시시기 등이 배합된 유형을 개인이 선택하게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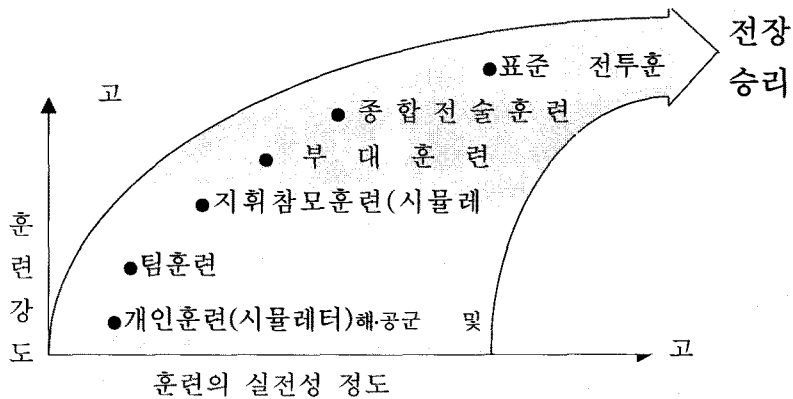


<그림 5> 예비군 훈련모델 설정(안)

이를 보면 예비군 훈련은 인터넷에 의한 Cyber 교육, CBT 교육, 훈련장 입소 숙달 훈련 등 다양한 방법의 훈련 실시가 프로그램 및 시간 별로 유형화 될 수 있으며, 예비군이 원하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yber 교육 및 CBT 교육은 평가결과에 의거 훈련시간을 적용. 입소(숙달) 훈련은 훈련성과를 고려하여 합격제를 적용하고, 불합격자는 재입소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과학화 문제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상비군부대와 호환성을 갖도록 예비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첨단 과학무기체계 발전에 부응한 종합적인 장기계획 수립, CBT를 이용한 교육훈련용 시뮬레이션 확대 개발 등이 그것이다.

교육훈련 방법의 과학화는 CBT 적용교육으로 실사격, 장비운용, 기동훈련, 참모훈련 등을 실전과 같이 훈련수준을 제고하고 학습의 성취도 및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민간사회의 경우 특히 항공회사의 경우는 조종사 비행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동차 운전교습소도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물론 우리 군의 경우는 상비군부대도 아직 초보단계이나 오히려 시간제한, 실전경험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예비군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라 하겠다. CBT를 이용한 교육훈련의 단계는 <그림 6>을 같이 고려할 수 있다(최광표, 1996: 70).



<그림 6> CBT를 이용한 훈련단계

이를 예비군에게 적용 가능한 분야는 개인훈련, 팀훈련, 특히 예비군 간부들의 지휘참모훈련이며, 부대가 종합적으로 심네트와 같은 종합훈련 상황을 조성하여 훈련이 상비군과 호환성과 일체감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VI. 예비군 훈련센터 정립

앞에서 언급한 과학화훈련은 훈련장과도 연계되는데, 지금보다 규모가 확대된 광역화 훈련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같은 필요성 외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가 필수적인 즉 사회와 공유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적으로는 예비군 훈련장은 비단 예비군훈련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참관하기도 하고, 체육활동을 하며, 병영체험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훈련장 개념을 예비군 훈련센터라 하기로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개념에서이다.

1. 기본개념 및 방향 설정

1) 훈련센터 설립 방향

예비군 훈련센터는 평시 민-군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국가 총력전에 대비할 수 있는 잠재 전투력의 경제적·효율적 양성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공원 및 복합체육시설, 청소년수련원, 민방위 교육장, 평생교육센터 등 국민과 함께 사용하는 훈련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건립, 현대화 및 과학화된 훈련시설 설치로 훈련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여건에 부합된 훈련여건의 조성을 위해 인구 과밀지역 중점 설치 및 과소지역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예비군훈련센터는 초기에는 향방예비군을 대상으로 하고, 후기에는 동원예비군을 포함하여

예비군 전체 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

2) 훈련센터 설치 지역

예비군 훈련센터는 행정구역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비군 자원수를 고려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주민(예비군)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는데, 광역시·도 단위에 훈련센터를 기본으로 설치하고 기본훈련센터와 장거리 이격지역인 경우는 보조훈련센터를 두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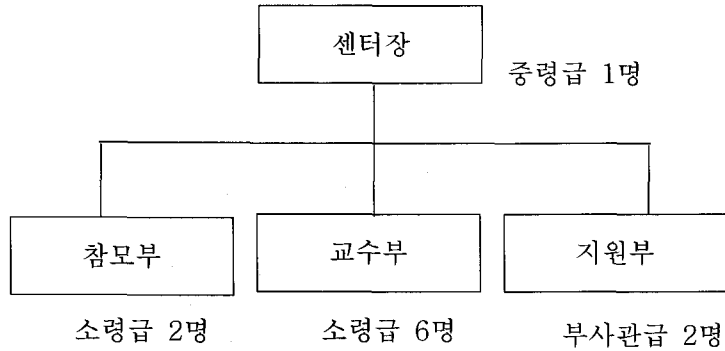
설치 기준은 자원관리 등록 주소를 근거로 응소 1시간 30분 이내로 하며, 권역별 예비군 자원 수를 고려하여 course를 복수로 설치한다(예: 3개 코스 5만명 이상, 2개 코스 2~5만명, 1개 코스 1~2만명, 보조 코스 1만명 이하 등).

하지만 장차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현 시점에서 훈련장 여분을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 2006년 4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법(안)에 따르면 시·도의 폐지와 시·군·구의 광역 통합이 작성된 만큼 이러한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⁴⁾ 장기적으로는 기본훈련센터, 보조훈련센터 개념이 아닌 course 개수에 따른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3) 훈련센터의 운영

훈련센터는 <그림 7>과 같은 구조의 조직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1개 course를 운영하는 센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센터 운영 정착시까지는 현역 /예비역 혼합편성 근무가 필요하며 정착 후에는 예비역 신분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4) 이 경우 훈련센터 개수는 현재 행정구역 단위보다 2배 정도 증대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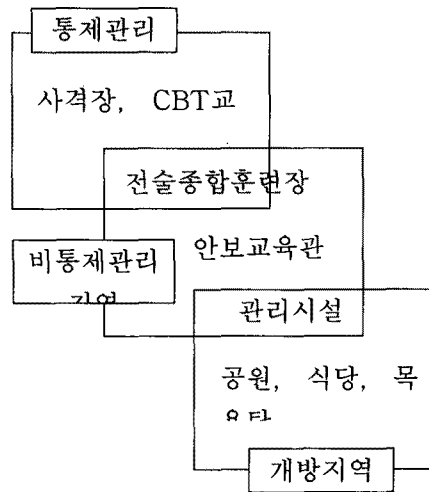


<그림 7> 예비군 훈련센터 인력 구조

훈련센터 운영을 보다 구체화 하면, 훈련 전담요원은 예비군 상근간부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각 군별 훈련담당을 구분하는 것, 과목 및 과제별로 전문교관을 양성/운용하는 것, 휴일 및 야간훈련을 고려하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 훈련장 시설관리, 훈련장 공원화, 훈련장 개방 등을 관리하는 요원은 비상근 직위로 운영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2. 훈련센터 시설

훈련센터 시설은 크게 훈련/통제 시설과 다용도 시설, 편의시설 등 3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훈련/통제 시설은 CBT 교장, 실내사격장, 전술종합훈련장, 주특기훈련장 등이 있고, 다용도 시설은 안보교육관, 관리시설이 있다. 편의시설로는 공원, 주차장, 목욕탕, 식당, 휴게소 등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들 시설의 배치는 <그림 8>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그림 8> 예비군 훈련센터 시설 배치

3. 훈련센터 교육 과목

훈련센터에서 실시할 교육과목은 현재의 교육 과목체계 외에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 필요한 과목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예비군 운용(특히 향토군 운용)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포괄적 안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것인즉 해당지역에 부합한 과목을 개발하되 이것도 어느 정도 표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기훈련 과목의 변화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교과목 설정은 제시할 수 없지만 <표 10>~<표 13>과 같은 바를 참고하여 결정해야 하리라 본다. 표들은 2003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한국국방연구원에

서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훈련과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훈련별로 현재 받고 있는 교육 과목 중에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물어 본 것인데 예비군들의 의식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 이유에서이다.

<표 10> 동원훈련 교육과목 중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2003년)
(단위 : %)

응답자특성	사례수(명)	증창설	직책	작계	사격	안보	계
전체	2,033	2.46	27.59	9.00	27.89	33.05	100.0

<표 11> 동원훈련 교육과목 중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2007년)
(단위 :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증창설 절차	직책 수행	작계 시행	사격 훈련	안보 교육	무응답	계
전체	1,046	2.49	15.58	5.33	25.82	42.25	8.53	100.0

<표 12> 일반훈련 교육과목 중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2003년)
(단위 :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지역	개인 화기	안보	환자 응급	장비 식별	첩보 수집	화생방	수류탄	주특기	계
전체	2,072	6.03	22.73	19.45	10.91	2.90	1.79	4.83	2.56	28.81	100.0

<표 13> 일반훈련 교육과목 중 늘려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2007년)
(단위 : %)

응답자 특성	사례수 (명)	시가지 전투	목진지 전투	수색 정찰	매복 훈련	사격 훈련	화생방 공격시 행동	구급법	대공 사격술	안보 교육	무응답	계
전체	1,046	17.35	2.99	2.70	2.35	17.99	2.13	10.67	1.28	33.21	9.32	100.0

VII. 결론

예비군 문제는 상비군체제에 비해 중요성은 항상 강조되나 실제 정책집행 면에 있어서는 강조되는 만큼 되지 못하는 입장이다. 서론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예비군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래도 기회비용 관점에서 현안업무에 비해 소외받기 쉬운 분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젠 국가보험 측면에서 이를 인식하여야 할 것인데, 이같은 인식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개혁에서 출발한다 하겠다. 기존 관념 틀 내의 관행적이고 담보적인 태도보다는 기존 관념의 틀을 깨트릴 수 있는 동태적이고 진취적인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리라 본다.

예비군 훈련 문제는 국가 유사시 대응능력과 직접적인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일례로 남북한이 통일 정부 수립을 실현하게 될 때, 동북아 최강 군사력을 지닌 국가를 주변 국가들이 지금처럼 용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상비전력을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차 예견되는 냉엄한 국제관계이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대내적으로 충실한 무장력을 지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금보다는 발전된 관점에서 장차적 예비군체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훈련되지 않은 예비군은 이같은 역할을 맡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들 중엔 상당한 논의와 작업을 거쳐야 될 것도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록 제도의 시행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줄 모르나 이 분야가 장차 군사력 건설에 있어 핵심이 될 분야이기도 한다는 점만은 잊어서는 안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

- 국방부. 2006.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서」.
- 국방부. 2006. 「2020 국방개혁안」.
- 김경민. 2007. “일본의 군비증강이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한국국방연구원.
- 김태호. 2007. “중국의 군비증강과 동북아 안보.” 「동북아 군비동향과 우리의 대응」. 한국국방연구원.
- 신진선. 2003. “한국 예비군 교육훈련 체제의 개선방안.” 경희대 행정대학원.
- 정원영. 2000. 「지방자치시대 통합방위」. 한국국방연구원.
- 정원영. 2002. 「동원사전」. 한국국방연구원.
- 정원영(외). 2005. 「예비전력, 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 정원영(외). 2005. 「국방행정론」. 대명출판사.
- 조효건. 2000. “예비군의 지역사회 관심도에 따른 예비군 훈련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대구대 사회개발대학원.
- 최광표. 1996.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국방교육훈련 발전방향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 한국국방연구원. 1994. 「예비군 교육훈련제도 개선 연구」.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5. 「발전적인 예비전력 육성 및 관리 방안」.

Thinking about the training system of R.O.K. reserved force in the future

Jeong, Won Young*

Reserved force's training(RFT) is undoubtedly the critical component to increase the national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It is because RF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the key deterrence force power for more than 40 years.

Considering the reserved force reform linked with the goal and the plan of Korean Defense Reform 2020', we can expect the utility of the reserved force as the potential combat power to make national defense resources more efficient and useful.

In that sense, this study suggests some solutions to promote the reserved force's competency to demonstrate the ROK Armed Force's combat power as the equivalent partner with the active force as well as the future deterrence power.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esent training system including law and regulation, identifies some implication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esigns the future ROK reserved force's training system by extracting new variables forecasting the future environment for national defense.

In addition, this study includes its concerned systems generally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without limiting the scope into the reserved force. Therefore we try to seek to prepare for mobilization readiness and to promote regional hometown defense capability in order to cope with the enemy's threat in case of emergency.

Key Words : Reserved force's training, Korean Defense Reform 2020